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ms투데이	온라인	(기획) ②반쪽짜리 개청?“공론화 과정 없는 조직 쪼개기”	1
江原日報	16면	사내면 경제 활성화 핵심 ‘토마토·軍장병’	3
江原日報		동해시가족센터 '엄마는 여행가이드' 개강식.오리엔테이션	4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전찬성(원주)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08면	[동정] 김희철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 의원	5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김기철(원주)·김정미 양구군의원	5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국비 9조5천억 확보 사활	6
강원도민일보	01면	최대 600mm 물폭탄 예고 초긴장 속 대응 강화	7
강원도민일보	02면	오늘 도 재난대책본부 비상 3단계 발령 전망	7
강원도민일보	04면	태풍 '카눈' 뜨거운 해수면 만나 더 강해졌다	8
강원도민일보	05면	루사·매미 악몽 떠오른 주민들 "이번엔 무사히 지나가길"	8
강원도민일보	15면	영동북부 지자체 태풍 비상체제 돌입 초긴장	9
강원도민일보	17면	태풍 경로 '예의주시' 정부·지자체 피해 최소화 총력전	9
江原日報	06면	이번주부터 도내 무량판 아파트 9곳 안전점검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부실 잼버리 '불뚝' 강원청소년올림픽 조롱 잇따라	10
강원도민일보	10면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속도낸다	11
江原日報	11면	원주 첨단 국방과학도시 선포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노인 디지털 소외, 심각한 사회 문제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카눈' 선제 대응 피해 줄이도록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 핵심 전략산업, 정부 국비 지원해야 한다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한반도 꺾이는 태풍, 人災·官災 소리 안 나와야	16

(기획) ②반쪽짜리 개청?“공론화 과정 없는 조직 쪼개기”

한승미 기자

[제2청사, 조기이행인가 졸속개청인가]
예산 준비 과정에서 행정 절차 하자 질타
제2청사 준비과정서 공론화 과정 없어
강원도립대 임시청사 사용에 교수 반발도
조직 기능, 규모 확대해야 청사 역할할 것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강릉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열렸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행정 비효율과 춘천시 인구 유출을 불러올 것이란 점은 제2청사 건립이 처음 공론화됐던 당시부터 예견됐던 내용이다. 막상 제2청사가 개청하고 보니 청사를 유치한 강릉에서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이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제2청사 개청을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2청사 개청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영동권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제2청사가 실질적인 청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공무원 조직에 관한 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권역별 부지사 임명권 등 제2청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도청 내부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제2청사는 예정대로 7월 문을 열었다. 김 지사가 지난 1월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서 공론화한지 반년만, 행안부와 관련 협의를 마친지는 불과 3개월여만이었다.

절차상의 문제는 예산 준비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다. 도의회에서는 제2청사 준비 예산 편성에 행정 절차 하자가 있다며 질타가 쏟아졌다. 조직 개편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먼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되는 진통 끝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서 되살아나며 최종 통과됐다. 정치권 등에서 행정 절차 하자, 도의회 패싱 등의 논란이 나오면서 꼭 7월 개청을 고집해야 하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 같은 제2청사 추진 상황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지사의 성급한 결정을 메우기 위해 강원도는 20일 이상 시행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제2청사 부지 확보도, 구체적인 행정기구 설치계획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만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2청사 예산이 강원도의회 본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청사 개청이라는 백년지대계를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불과 6개월 만에 급하게 추진한 김 지사와 도, 도의회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치 지역과 위치 선정을 두고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이다. 왜 강릉에 설치해야 하는지, 또 주문진에 위치한 강원도립대 안에 임시청사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제2청사 개청은 영서, 영동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컸는데 개청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해 현재의 조직을 쪼개고 나누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변화된 위상에 걸맞은 조직 확대와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제2청사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경제단체들을 비롯해 성급한 이전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왔다. 강원 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도지사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주민들과의 여론 수렴없이 제2청사를 강릉에 설치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행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영동지역 7개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 강원도청사 공론화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켜 주민 설명회를 비롯해 이관 타당성 용역을 제안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2청사 개청 전후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립대가 제2청사 임시청사로 낙점되면서 이 대학 일부 교수들은 사용하던 공간을 내줘야 했고 학생들은 화장실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 공무원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김용태 강원도립대 교무팀장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내줘야하니 반발이 없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도립대가 별도 기관이 아니라 도와 한 식구라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도립대”냐는 반발 목소리가 높았고 민원인 방문에 따른 문제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캠퍼스에 딱딱한 공직사회 조직문화가 스며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동지역 주민들도 개청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다. 당초 구상보다 조직 기능과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강릉시의회에서는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한 줄속 개청으로 보여지기 않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 당초 5개국 설치 계획이 환동해본부의 기능과 인원 보강에 그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윤희주(국민의힘) 강릉시의원은 “2청사는 가져왔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나 광역행정서비스 기능 확대가 강릉까지 왔느냐에 대한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법에 자치조직에 대한 자율성이 조금 더 부여가 되는 특례조항을 담고 분장사무, 행정기구 설치 등을 구체화, 법률화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립대 전경. (사진=강원도립대)

강원자치도 측은 이 같은 문제들이 제2청사 개청이 줄속 추진의 부작용이 아니라 공약 조기 이행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진통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제2청사가 강릉에 설치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부터 공언했던 내용이며, 강원도립대 사용은 강릉시와의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강릉 시내와 주문진 등을 놓고 강릉과 논의한 결과 주문진이 제일 적당하고 도유 건물이라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환동해본부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비워두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분리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도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자치 조직에 관한 특례를 반영해 제2청사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청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제2청사 추진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했는데 행안부와 협의가 많이 늦어져서 시기가 촉박해진 것”이라며 “일단 지역본부로 여건을 만들고 부지사급 승격 여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릉 출신인 권혁열(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제2청사 이전이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청사의 3개국 개청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가장 주장했는데 청사의 확대, 개편이 서서히 실천될 수 있다”며 “공무원 복지, 주거문제 해결 등의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승미·최민준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江原日報

2023년 08월 10일 (목)

지역 16면

사내면 경제 활성화 핵심 ‘토마토·軍장병’

상인의식조사 82% 대표 자원 ‘토마토’ 선택 축제영향 커
카페·주점 손님 69% 군인... 군장병 소비 촉진 방안 필요

【화천】화천 토마토축제가 대박 축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축제가 개최되는 사내면 주민들이 토마토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자원으로 꼽았다.

사내면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최근 사내면 상권의 여건 분석과 상인 중심의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4%가 지역 대표 자원으로 ‘토마토’를 꼽았으며 6.1%는 ‘약초’, 2.3%는 ‘목공예’라고 응답했다. 토마토를 대표 자원으로 선택한 것은 토마토축제가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

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27사단 해체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90.1%가 ‘그렇다’고 응답, 사단 해체로 인한 상경기 악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단 해체 후 15사단이 배치됐지만 지역 상인들은 여전히 27사단 해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카페 및 주점의 경우 주요 고객의 69%는 군장병, 8.5%는 면회객이라고 응답, ‘군인경제’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박대현 도의원은 “군장병 소비 촉진을 위해 교통 편의를 지원하거나 눈높이에 맞는 쉼터 제공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江原日報

2023년 08월 09일 (수)

사회

동해시가족센터 '엄마는 여행가이드' 개강식.오리엔테이션



동해시가족센터(센터장:우미강)는 9일 센터1관 2층 교육장에서 2023년 동해기금관리위원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 장기프로젝트 '엄마는 여행가이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유순옥 도의원, 민귀희 동해시의원, 석해진 동해시 가족과장, 김태흠 동해쌍용C&E 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결혼이주여성 등이 참여했다.

동해 동해시가족센터의 2023년 동해기금관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인 글로벌 인재양성 장기프로젝트 '엄마는 여행가이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9일 센터 1관 2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유순옥 도의원, 민귀희 동해시의원, 석해진 동해시 가족과장, 김태흠 동해쌍용C&E 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결혼이주여성 등이 참여했다.



동해시가족센터(센터장:우미강)는 9일 센터1관 2층 교육장에서 2023년 동해기금관리위원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 장기프로젝트 '엄마는 여행가이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유순옥 도의원, 민귀희 동해시의원, 석해진 동해시 가족과장, 김태흠 동해쌍용C&E 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결혼이주여성 등이 참여했다.

동해쌍용C&E에서 출현한 기금으로 진행되는 '엄마는 여행가이드'는 동해시 거주 3년 이상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관광가이드 양성과정, 지역 내 명소탐방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여행 가이드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업이다.

유순옥 도의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과정을 끝까지 잘 수료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미강 센터장은 "이중언어능력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업영역을 확장하고자 마련된 장기 프로젝트에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인물동정 09면



전찬성 (원
주) 도의
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언론

진흥재단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인물동정 08면



김희철 도
의원은 10
일 오후 2
시 강원연
구원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교
육분과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인물동정 14면

지역 시설물 점검활동
을 벌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인물동정 09면



원제용 (원
주) 도 의
원은 10일
오후 2시
원주 법천

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지광국사탑재
환수식에 참석한다.



김기철(왼쪽)·김정미
양구군의회는 10일 오
후 양구읍 일원에서 태
풍 및 집중호우 시 위험

江原日報

2023년 08월 10일 (목)

종합 02면

강원자치도 국비 9조5천억 확보 사활

김 지사, 기재부에 반영 요청

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주요 국비 현안 사업과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원자치도는 내년 9조5,0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세웠으며 기재부는 내년 정부예산안 최종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강원 자치도 3대 미래산업(본보 9일자 1

면 보도)의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43억원 등 93억원의 반영을 노리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차세대 체외진단실증 및 제품화 지원, AI 헬스&바이오 R&D 센터 구축 및 AI 솔루션 개발·실증

등에 국비 127억원을 요청했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에는 내년 국비 12억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양양 서핑교육센터 조성 10억원, SOC 사업은 제2경춘국도 500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4,200억원, 강릉~제진 철도 4,500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춘천 소양8교 49억원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종합 01면

최대 600mm 물폭탄 예고 초긴장 속 대응 강화

태풍 '카눈' 한반도 관동

영서 200mm·영동 400mm 비
중대본 비상근무 최고 단계
축제 일정·관광지 운영 취소
11개 학교 휴업·14곳 단축수업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초강력 태풍 '루사'로 인해 썩대밭이 됐던 양양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강원도민들은 태풍 '카눈'의 접근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태풍은 한반도 내륙을 가로지르면서 도내 영동의 경우 최대 600mm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도 최고단계인 3단계로 상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태풍 '카눈' 강원도 직격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9일 오후부터 강원도는 태풍 영향권에 들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도내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기상청은 10일 오전 6시~낮 12시를 기점으로 춘천을 제외한 도내 영서·남부지역과 영동 중·남부 앞바다, 동해 중부 안쪽 편



속초시는 9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교통 부두에 있는 선박에 대한 결박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속초시

바다에 태풍 예비특보를 예고했다. 같은 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춘천, 영서 북부, 영동 북부 앞바다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예고된 상황이다.

강원도내 곳곳은 9일부터 태풍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강원도내 영동 일대와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영동 일대에서 시작된 비는 도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9일 오후 3시 이후 영서 남부

에서, 오후 6시부터 그 외 전역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은 영동 200~400mm로 많은 곳은 600mm 이상 내리겠다. 영서 지역은 100~200mm의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동지역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시간당 60~80mm의 강한 수준으로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자체 초긴장

강원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와 소

방당국 등 관계 기관들은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소방본부는 침수 우려 지역 49곳 등 중 취약 지역 21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동일 시간대 119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대를 30대로 증설하고 인력 48명을 추가 배치했다. 동해시는 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114곳, 해안 시설, 주요 도로, 관광지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마쳤으며 속초시도 태풍 북상에 대비해 부서별 대비체계를 마련하고 조기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해경은 관할 항포구 어선·유도선(다중이용선박) 계류상태를 점검하고 해안가, 방파제 등 위험구역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욕장 입수통제 및 연안사고 위험구역 출입통제와 재난방송 송출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강릉문화원은 제10회 명주인형극제의 10일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삼척시는 10~11일 이틀간 축서루와 관아지 일대를 임시휴관한다. 삼척해상케이블카와 장호비치캠핑장, 조곡유골초대비유길은 10일까지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북한강수계 등들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강수력본부는 9일 오후 7시부터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과 청평댐, 의암댐과 춘천댐 등 북한강수계 댐 4곳의 수문을 개방했다. 방류 수준은 초당 300~880t 수준이다.

학사일정도 조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도내 초·중·고교 11곳(유치원·초교각 1곳, 중학교 2곳, 고교 7곳)이 휴업한다. 중학교 2곳과 고교 1곳은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고 유치원·초·중·고교 14곳은 단축수업을 한다. 유치원 1곳과 고교 2곳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재훈·지역종합 ▶관련기사 2·4·5·15·17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종합 02면

오늘 도 재난대책본부 비상 3단계 발령 전망

태풍 '카눈' 한반도 관동

24시간 합동 재난대응 체계 가동
김 지사 등 현장서 선제조치 점검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대비에 나선 가운데 10일부터는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오전을 기해 3단계 발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을 기해 재난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태풍 대응 전담팀은 19개 부서 22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각 시·군 및 강원기상

청·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8개 기관과 24시간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진태 도지사와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내 급경사지·건설현장·지하차도를 방문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춘천시 학곡지구 개발공사 현장을 찾아 대형크레인 등 강풍취약 옥외구조물과 급경사지를 확인하면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으로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조치에 나서달라"고 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태풍 상황으로 인해 여름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 김 부지사는 산림엑스포 주경기장인 고성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춘천시 학곡지구 개발공사 현장을 찾아 강풍 취약 옥외구조물과 급경사지를 점검했다.

군 세계접버리 수련장을 방문해 솔밭울전망대, 아와무대, 주차장, 배수로 등 시설 피해 대책을 점검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홍천군 홍천교·둔치주차장과 횡성군 청곡지구 급경사지 등을 점검했다. 또, 춘천역 지하

차도 등을 살폈다. 도는 도내 저수지 299곳 중 범람 위험이 큰 강릉시 오봉저수지, 철원군 토교저수지 등 대규모 저수지 수위를 45% 수준까지 낮췄다. 평상시 수위는 80%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도내 태풍 상황 등을 공유하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종합 04면

태풍 '카눈' 뜨거운 해수면 만나 더 강해졌다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영동 최대 순간풍속 시속 125km 예측

제6호 태풍 '카눈'이 위력을 우려하는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세력을 유지한 채로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면 온도가 높을 경우 해양 열용량이 충분해 태풍은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더 강하고 빠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카눈의 경로인 남해안

일대가 27~29도로 평년보다 높아 해양 열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은 현재보다 낮고 최대풍속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 악몽으로 남아있는 태풍 '루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며 힘을 쌓은 상태로 한반도에 도착했다. 2002년 8월 31일 상륙해 도내에서 128명의 사망자와 15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총 205명의 인명피해가

난 태풍 '루사'는 태풍 '카눈'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진입 당시 남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아 수증기가 다량 유입, 많은 양의 비구름이 형성되고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반도에 '카눈' 이상륙으로 도내 영동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125km에 달하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서의 경우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70~11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사회 05면

루사·매미 악몽 떠오른 주민들 “이번엔 무사히 지나가길”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동해안 어선 출어 포기 '초긴장'
태풍 영향권 관광객 발길 돌려
피서철 식당·호텔 상인들 울상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영동지방에는 9일 오후 점차 태풍의 '전조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업인 등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피서대목을 놓친 동해안 횡집과 상가집들은 매출감소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9일 강원 영동지역에 최고 600mm의 물 폭탄이 예보되자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겪은 강릉지역은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의 경우 강릉은 기상관측 이후 최대 일일 강수량인 87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루사로 강릉에서는 사망 46명, 실

종 5명, 부상 17명 등 68명의 인명피해와 8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릉시민 이모(53)씨는 “강릉은 루사에 매미까지 역대급 수해를 다 겪은 동네기 때문에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이번 태풍 카눈이 더 두렵다”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도 태풍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부디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동해시 묵호항. 항구의 어선과 화물선 등은 지난 6일부터 출어를 포기하고 부두에 정박해 있다.

문어잡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D여선의 선주 최모씨(60) “7일 정도 출어를 못하는 것도 피해이지만 배가 침몰되거나 파손될 경우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무사히 지나가길만 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휴가차 아이들들과 아내 등 가족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망상해수욕장을 찾은 A씨(35)는 “동해안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오래전에 계획된 여행이라 취소에 없었다”며 “모래사장에서도 아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동해안에 최고 600mm의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9일 강릉시 상습 침수지역인 경포진안상가에 대형 펌프가 설치됐다.

이연제

이들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 있었다”고 말했다.

망상해수욕장 상가의 횡집과 음식점들은 지난해보다 긴 태풍의 영향에

쉬는 날이 많아져 매출이 감소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상인 B씨는 “지난해는 태풍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 날이 3~4일 정도였다면

올해는 가뜰이나 해수욕장 방문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영업을 못하는 날이 일주일 정도로 길어 어려움을 많다”고 말했다. 전인수·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지역 15면

영동북부 지자체 태풍 비상체제 돌입 초긴장

속초·고성·양양 대비상황 점검
도로시설물 결박 등 피해 예방
24시간 기상 모니터링 예찰 강화

제6호 태풍 '카눈'이 다가오자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은 초긴장 상태에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한 뒤 11일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가 특히 영동지역의 경우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들 것으로 예상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태풍 주위 바람은 중심을 향해 반시계방향으로 불기에 중심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지난 6일부터 일찌감치 부서별 대비체계를 마련하고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40곳에 대해



양양군은 9일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하수관 및 맨홀의 낙엽, 쓰레기 등 도로 청소를 실시했다.

'심각, 경계, 주의, 관심' 4가지 위험등급으로 분류하고 책임 담당자 73명을 간부급 공무원으로 지정했으며 도로 시설물에 대한 결박작업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해안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상습 침수구역 내 대피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비상연락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예측 시 즉각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과 주민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동은 동장 지휘하에 저지대 침

수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마대, 수중펌프, 양수기를 배치하고 빗물받이 전수점검과 낙엽제거, 가로변 쓰레기통 결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도 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24곳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94곳을 점검했다. 또한 응급복구 및 침수방지용 장비 19종 19만여점을 확보했다. 지난 8일 행정·경찰·소방 관계기관 태풍대비 협업회의를 추진해 24시간 기상모니터링 및 전파,

유관기관간 연락체계 구축을 재점검했다. 해수욕장 등 휴양지 종합상황실 운영과 현장대응반을 6개조 24명 구성해 현장 견문보고를 실시했다.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어선 167척을 육지로 인양했다.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지난 7, 8일 낙산을 비롯한 대형 건축공사 현장과 토석채취, 산지전용, 태양광 등 대형공사 현장에 대해 가설울타리와 지하굴착지 침수관리 등 안전점검과 함께 허가지의 침사지 준설 및 배수시설을 긴급 정비했다.

또 수산양식시설과 항포구 어선 등 주요 해양수산시설의 피해에 대비해 결박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21개 해수욕장에 대해 입수금지 및 해수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경보방송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훈·박주석·지산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종합 17면

태풍 경로 '예의주시' 정부·지자체 피해 최소화 총력전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강풍·폭우 등 전국 직접 영향권
해수욕장·일부 도로 출입통제
항공·여객 운항도 결항 예상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국내에 상륙해 한반도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천천히 종단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거 태풍으로 인한 강풍·침수로 큰 피해를 겪었던 지역에서는 차수벽·모래주머니·소방장비 등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상청의 9일 브리핑 등 내용을 종합하면 카눈의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

각 970hPa과 시속 126km(35%)로 강도 등급은 '강'이다. 10일 아침 전남과 경남 사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 후 이날 오후 3시 청주 남동쪽 20km 지점, 같은 날 오후 9시 서울 동쪽 30km 지점을 지난 것으로 예보됐다. 이처럼 카눈이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면서 남에서 북으로 느리게 종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에 따라 전국이 강풍과 폭우 등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태풍 카눈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중 사

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지자체도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자원원을 총동원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인명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일부 해안가 산책로·해안도로,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출입통제가 실시됐다 전국 14개 공항에서는 강풍에 대비한 항공기 결박조치와 배수시설·지하차도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10일까지 항공편 및 여객선 운항 등도 차례로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항구에서는 태풍 북상에 대비한 선박 대피에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 현장은 대부분 여름방학 중이긴 하지만, 돌봄 및 수업 등으로 문을 여는 학교에 한해서는 탄력적 학사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0일 (목)

경제 06면

이번주부터 도내 무량판 아파트 9곳 안전점검

전국 293곳 대상 도면검토·콘크리트 강도 확인

국토부 합동 조사 실시...부실시공 시 행정처분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주거동이 포함된 단지의 경우 구조계산서, 도면 검토, 콘크리트 강도 점검 등을 우선 시행하고 세대 내부 조사는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점검과 관련한 안전점검 방안과 관계기관별 역할,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 중인 아파트는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광역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도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 중인 단지는 이미 진단업체가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공문이 전달되면 바로 점검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된 단지는 진단업체 계약을 하는 단계가 필요해 점검 시작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약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한편 안전점검은 최대한 공용부분을 활용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동의 경우 무량판 구조와 벽식 구조를 혼합한 '무량복합구조'를 주로 사용하는데 벽식 구조가 많이 혼합돼 있어 사실상 벽식 구조와 유사하다"며 "무량판 구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를 점검해야 하는데 공용 공간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동참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 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이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



◇최근 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관계자가 드립패널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되면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점검은 2017년 이후 발주된 무량판 공법 적용 민간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293곳이다. 도내에서는 7곳이 해당됐으나 최근 2곳이 추가 확인, 점검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도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입주 단지는

당초 188곳에서 60곳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안정성이 입증돼 현장 조사에서는 제외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종합 04면

부실 잼버리 '불뚝' 강원청소년올림픽 조롱 잇따라

선수단 숙소·예산 미확정 관련 인터넷서 '잼버리 시즌2' 비난 확산
내달 국감서 대회 준비 사전점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 준비미흡 논란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까지 불뚝이 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및 블로그, SNS 등에는 이번 잼버리 사태를 엮어 내년 1월 치러지는 '2024강원대회'를 향한 비방, 비판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9일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게시물들 살펴보면 대체로 대회 개최가 반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 숙소 및 대회 장소, 관련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일부 게시물에선 청소년올림픽을 '잼버리 시즌2'라고 지칭하는 등 조롱섞인 비난이 이어졌다.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로 규정하면서 현 강원도정을 겨냥, 악의적인 정치적 비판까지가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2024 강원대회' 준비 상황과 관련한 대대적인 사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2024강원대회'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대회관련 현안 질의에 나설 제비를 갖추고 있다.

문체위 소속 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잼버리 사태로 인해 향후 개최 예정인 국제 행사들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안 질의를 통해 대회 준비상황을 세심히 확인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이라고 했다.

2024대회 준비 상황 등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적됐었다. 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스포츠계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

다. 임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원도의 지금 건물, 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나. (이런 곳에서) 무슨 경기를 치른다고 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문체위 소위에서 "경기장은 평창올림픽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시설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이날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띄운 야권을 향해 "민주당은 더 이상 윤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나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했다.

이세훈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관련 게시물 캡처.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지역 10면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속도낸다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 공고
내년말까지 청사진 구체화
철도·도심항공교통 등 연계
첨단 모빌리티 선도 기대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상안.

강릉시가 철도, 버스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동시에 연계하는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9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용역사업 공고를 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미

래형 환승센터(MaaSStation)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 원을 투입, 내년 말까지 복

합환승센터 수요분석에 따른 청사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용역은 강릉선 KTX와 강릉~부산 간 동해중남부선 고속화 철도 연결, 강릉~고성 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등으로 영동권 광역철도 교통망의 허브로 떠오른 강릉역 인근 20만 6890㎡에 관광형 및 거점형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강릉시는 2026년에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를 유치, 도시 전역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모빌리티 운영을 늘리고 있는 여건에 맞춰 다양함 모빌리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보이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2026~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법정계획에 반영, 민간사업자 유치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강릉시관계자는 "ITS세계총회 개최와 함께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교통혁신의 계기를 마련, 도심 경제권의 교통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첨단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재

江原日報

2023년 08월 10일 (목)

지역 11면

원주 첨단 국방과학도시 선포

시, 국방과학연구소·미래기술연구센터 분원 유치 추진

【원주】원주시가 첨단 국방과학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시와 원주상공회의소는 9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첨단 국방과학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는 첨단 국방과학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우선 미래 바이오 군(軍)식품을 집중 육성한다. 군 급식 관련 기업은 물론, 기능성·항바이러스 식품 분야 기업 유치에 매진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성능 계량 산업 및 군수장비 제조업체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첨단소재 무기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분원 유치에 도전한다.

미래형 첨단무기 분야 집중 육성도 첨단 국방과학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실천과제로 꼽았다. 드론시험평가센터와 연계한 군사 드론 제조를 목적으



◇첨단 국방과학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이 9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원강수 시장과 이재용 시장의,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이문환 원주상공회의소 부회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이상의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허남윤기자

로 한다. 시는 또 첨단 바이오 국방과학도시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향후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원강수 시장은 “군사도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첨단산업화에 나설 방침”이라며 “첨단 국방산업의 방향성이 반도체 도시와 연계되는 만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

조했다.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원주시의 첨단 국방과학도시 비전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강원자치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한 해 국방예산 57조원 중 상당수는 전력 지원 강화에 쓰일 정도”라며 “원주와 강원자치도가 첨단 국방산업의 첨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노인 디지털 소외, 심각한 사회 문제

-금융거래·교통 예약·식당 등 불편 일상화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일상생활도 디지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병원·은행·식당·터미널 등 사회 전분야에 무인 시스템이 활용돼, 시민들이 빠르고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를 수단으로, 새로운 시스템은 이미 생활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주문과 예약, 현장 영업에서 무인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면 방식에 익숙한 고령층은,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불편이 큼니다. 불편의 차원을 넘어 생활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는 반응도 있습니다. 노인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로 그 심각성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식당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로 주문해 본 경험이 있는 강원지역 노인은 32.8%에 불과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노인 중에서도 '불편하다'는 응답이 78.8%에 달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고속·시

외버스 예약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본 노인은 31.5%에 불과했으며, 예약 경험이 있는 노인층에서도 94.9%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쓰는 노인들도, 메시지 전송이나 사진 촬영 등에 단순한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1개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거래·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에 쓴다는 대답은 6.2%로 매우 저조합니다. 온라인쇼핑도 5.6%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시스템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배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로만 신청과 예약, 거래가 가능한 경우 노인들로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자녀들에게 연락해 해결하기도 여의찮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왜 적응을 못하느냐'는 지적은 어르신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안길 뿐입니다. 정부도 첨단 생활 시스템만 강조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부터 대면·유선 방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공감과 배려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의 젊은 층도, 노후 급속한 환경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카눈’ 선제 대응 피해 줄이도록

-강풍 동반 최고 600mm 폭우 예보, 신속한 협업 조치로

오늘과 내일 강원지역에 태풍 ‘카눈’이 내습하면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50명이 사망 및 실종되는 참변이 발생했기에 시민들은 더 민감한 상태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평소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는 참사가 빚어진 현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기상청은 세력 ‘강’을 유지한 채 국내 상륙한 ‘카눈’ 영향으로 10일 밤까지 장시간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되며, 강풍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오전까지 세차게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동해안엔 최고 600mm의 폭우를 비롯해 도내 전역에 100~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간 최대풍속은 동해안 초속 25~30m, 영서 내륙은 20~30m로 강풍이 예측됩니다.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행정력, 소방과 경찰력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지역 태풍 취약지 16만여

곳에 대한 사전 점검이 있었고, 도심과 농산어촌 곳곳에 출입 통제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태풍은 진로와 강도 변화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퍼붓고 강풍이 휘몰아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풍은 다양한 시설물이 즐비한 도심과 시내 중심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돌풍은 간판 등 외벽 구조물, 건물 유리창과 지붕, 외장재 그리고 거리 공공시설 등을 파괴하면서 안전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시민들이 태풍 대처 지식에 일정 수준 올랐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각종 뉴미디어 등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기상 및 재해 정보가 속지돼야 합니다. 도내엔 여름 무더위를 피하고자 여행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낯선 환경으로 인해 정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 대책은 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제방 붕괴와 산사태 등 신속하게 현장 상황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재난 대응력이 통합적이고 기민해야 합니다. 비상경계에 들어간 수산과 산림 등 분야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재해업무기관 간 협업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됩니다. 선제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 핵심 전략산업, 정부 국비 지원해야 한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제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분야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는 지자체 한 해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다. 기반 구축 사업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강원자치도는 국가예산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뤄지는 하반기에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특히 내년은 김진태 도정의 임기 반환점이다. 전략산업에서 확실한 성과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지사가 직접 팔을 걷고 정부부처를 방문한 이유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45억원 등 총 95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 중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의 국비 반영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막판까지 타 지자체의 반도체 사업 계획과 경합이 예상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춘천), 노인성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 기술개발(강릉), AI 기반 디지털헬스 수출 지원 플랫폼(원주), AI헬스·바이오R&D센터 구축(춘천·강릉)에 148억원의 반영을 노리고 있다. 아직은 전액 반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산업의 경우 3,200억원대 대형 사업인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력 양성, 장비 지원에 국비 12억원을 요청했다. 예타 통과 여부에 따라 예산 반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미래전략 핵심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확실한 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모두가 강원도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이어서 하나같이 중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경제 여건은 변수가 많고 외부 악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거란 전망이 많다. 어려운 여건인 만큼 도는 빈틈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맞춤형 대응으로 부처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도 이 같은 도의 요청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강원자치도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0일 (목)

사설/칼럼 19면

한반도 꺾이는 태풍, 人災·官災 소리 안 나와야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서쪽으로 경로를 바꾸며 강원 전역이 태풍의 위험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지역에는 11일까지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이 비상이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와 관재(官災)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재지변을 인간의 힘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 중 어느 한 곳에서 통행금지만 시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8일 오후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침수 도로 등을 비롯해 빗물받이, 반 지하주택, 둔치주차장, 지방하천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장마 기간 지속된 강우로 지반이 약해졌거나 기존 산사태 피해가 있었던 주변 지역은 적은 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젠 기후변화에 맞춰 재난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기록적인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가 거의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며 일상화하는 징후가 뚜렷해지는 데 있다. 2020년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다. 역대 풍속 순위 7위까지의 태풍이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했고, 2010년대의 폭염일수도 그 이전보다 5일이나 많은 15.5일로 집계됐다. 일상화한 폭우와 폭염은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판단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로 폭염이나 폭우, 가뭄 등 기후 재난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는 지구상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감축은 전 세계가 동참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적 의제다.

우리나라가 큰돈 들

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히 줄여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감축 비용은 자국 부담이지만 감축의 편익은 전 세계가 골고루 누리게 된다. 개별 국가들이 감축에 적극적일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적응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선 안전 기준을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홍수 피해를 키운 저류시설을 비롯한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은 50년 빈도 확률 강수량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 100년 만의 폭우를 경험했으니 100년 빈도로 높여야 한다.

道 전역 위험지대, 영동 최대 600mm 폭우 예상
급경사지, 침수 도로, 지방하천 철저한 점검을
기후변화 차원에서 방재 대책 강구해 나갈 때